

인도 덮친 날벼락 교통사고...광주도 예외 아니다

서울 도심 차량 인도 돌진 15명 사상

서울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덮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나자 광주·전남 지역민들도 '남의 일이 아니다'며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도 차량이 인도를 덮쳐 학생들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보행자 5명이 다쳤고 10대 한 명은 신체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는 점에서다.

지난 1일 밤 9시 30분께 서울시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차량은 당시 인근 차량을 잇따라 추돌한 뒤 횡단보도를 넘어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서도 최근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 사거리에서 50대 B씨가 몰던 SUV 차량이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뒤 인도를 덮쳤다.

시내버스가 사고 직후 옆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까지 충격하면서 20대 버스 승객 1명과 60대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인도를 지나던 사람은 없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B씨가 우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버스를 충돌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 중이다.

지난달 27일 밤 9시 50분께에는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에서 60대 남성 C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를 덮쳤다.

차량은 인도에 설치된 울타리와 가로등 등을 파손하고 인도에 있던 중학생 2명까지 치었다. 중학생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점을 토대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새벽 3시께에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천사거리에서 D(23)씨가 승용차를 몰다 맞은편에서 오던 SUV와 정면충돌한 뒤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인도를 걷고 있던 10대 3명이 차에 치여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 중 한 명은 한 쪽 다리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 중 한명은 발목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10대 1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D씨는 교차로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맞은 편에서

광주시청 앞 추돌 후 인도 덮치고 광천사거리선 10대 다리 절단 등 부상 수완지구에서도 중학생 2명 중경상 등 잇단 사고에 시민들 "일상 공포" 학부모들, 자녀 걱정 태산...전문가 "도로시설물 보완 등 보호대책 필요"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좌회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피해자 하반신이 사라졌다", "공중으로 튕겨나가 나무에 걸렸다"는 등 출처 불명의 괴소문까지 돌면서 공포심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사이의 소문이 학부모에게까지 전해지면서 보행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피해학교 학부모는 "자녀에게 '길을 갈때도 도로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라', '보행중에는 절대 휴대전화를 보지말라' 등의 당부만 날마다 하고 있지만 불안감을 감출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급발진 주장' 사고도 있었다. 지난 4월 18일 낮 12시 1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에서 승용차가 카페 건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제동 장치가 작동된 적 없으며 가속 페달을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김규민(30)씨는 "차가 급발진을 했다더니, 인도를 넘어 사람을 쳤다"는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니 불안하다"며 "언제 차량이 덮칠

지 모르니 인도도 무서워서 마음 놓고 걸을 수 없었다"고 허를 찼다.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정은혜(여·36)씨는 "아이들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비슷한 사고를 당하진 않을지 불안하고 무섭다. 아이들이 조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고도 아니지 않느냐"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등 지자체에서도 보행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운전자부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보행자 또한 '100% 완벽한 안전지대란 없다'는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중표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는 "교통사고 대부분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만큼,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보행자도 차로 인근에 있을 때 항상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등 안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도로 시설물 또한 보행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사건 인사이트

'보도방 칼부림' 보복살인 혐의 적용 왜?

접객원 조달 갈등 빚은 듯...광주지검 "갈취 신고 협박에 보복 범행"

'광주도심 유흥가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인 '보도방' (유흥업소 접객원 앞선) 업주가 '살인 혐의'가 아닌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A(57)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살인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엄하게 처벌받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흥기를 휘둘러 B(44)씨를 숨지게 하고 같은 업종의 C(46)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보도방 업자들을 갈취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B씨의 말을 듣고 A씨가 범행한 사실을 밝혀내 A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광산구 조직폭력단체에 가입한 A씨가 10여년 전부터 광산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해결사' 역할을 맡아 신규 업자의 진입을 통제하는 등 보도방 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을 확인했다.

업계에서 '롤폰'으로 통하는 전화기의 양도 양수를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방을 차리려는 사람은 유흥업소와 유흥종사자들 연락처가 저장돼 있는 영업용 '롤폰'을 기존 업자로부터 300만 원에 구입하면서 A씨의 허락을 별도로 받았다.

보도방 업자들이 영업을 그만둘 때 새로운 '롤폰' 양수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A씨에게 콜폰을 반납하고 보증금 300만 원을 돌려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강제로 다른 보도방 업자들로부터 300만원을 걷고, 영업을 접는 업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기도 했다.

하지만 광산구 월계동 유흥상권이 번창하면서 A씨의 장악력에 문제가 생겼다. 접객원 수요가 크게 늘어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유흥업소 업자들은 '상가번영회'를 조직해 접객원을 직접 고용하고 서로 인력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B·C씨는 이들을 겨냥해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등을 내세워 집회·시위를 개최했다. 집회현장을 지나가던 A씨를 발견한 B·C씨는 확성기를 통해 'A씨를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A씨가 보복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자신(A씨)은 다치지 않고 흥기에 힘을 잘 전달하기 위해 흥기를 붓대로 감싼 점과 흥기의 길이를 불태 A씨가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수 있었을 것이라는 서울대법의학 교수 자문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광주지역 경찰과 공조를 통해 A씨의 불법 보도방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파악해 환수하는 등 범죄의 유인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성 참사, '위험의 이주화'가 빚은 사고 광주·전남 전지산업 안전대책 마련하라"

지역 노동시민단체 촉구

광주·전남지역 노동시민단체가 화성 참사를 '위험의 이주화'가 빚어낸 사고라며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송정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정책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번 화성 참사 희생자 대부분은 이주노동자들로, 광주전남지역 산업단지, 전지사업 노동안전보건 시스템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4월 울촌산단 포스코 2차전지 리튬 건설현장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재난발생 시 이주노동자들에게 긴급 재난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하고 안전교육에서 통역사를 배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위험한 업종은 원천이 책임질 수 있도록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단체는 "미온적인 대책만 반복하기 때문에 산업단지와 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것"이라며 "현장에 기반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별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노동안전보건 정책을 개선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손 할퀴었다"며 고양이 두마리 던져 죽인 20대 송치

'손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고양이 두 마리를 벽에 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북부경찰은 2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 광주시 북구 중흥동의 자택에서 고양이를 벽에 던져 죽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고양이 무료 분양 카페를 통해 올해 초 고양이 4마리를 입양해 이 중 2마리를 벽에 던져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고양이가 몸을 할퀴어 손

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고양이를 입양해 준 전 주인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지 않고 온라인 카페를 통해 추가로 고양이를 입양한 것을 확인한 전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 A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추가 입양한 동물에 대한 확대행위가 있는 지 등도 들여다 보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창호(샷시)교체